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국무총리 지시 제 6 호

1976. 4. 16.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각급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강화에 관한 지시

1. 각종 정부 시책의 입안 과정이나 확정 단계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관계기관 상호간의 형적 협조의 미흡은 예기치 못한 문제를 사후에 발생케 하여 국민에게 불의의 피해를 주는 동시에 정부의 공신력을 손상시키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2. 특히 정책의 입안 과정은 물론, 중간 결재 단계에서 기관간의 간단한 협조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를 반드시 알아야 할 기관에게까지 알리지 않고 기관장의 결재를 필한 연후에 비로소 확정된 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함으로써 타기관의 의견 반영이 곤란하게 된다는 점, 심지어는 관계기관에 통보조차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확정 시행함으로써 시행과정에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3. 각종 정부시책 중에는 그것이 비록 입안기관의 배타적인, 법정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타 기관 업무와 직접 간접으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또 입안기관 단위의 업무라는 견지에서보다 정부시책이라는 보다 높은 차원에서 입안 추진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 허다한 것이므로 각급 기관은 크고 작은 시책의 입안이나 추진에 있어 타 기관 소관 사항과의 관련성을

마진없이 고려하고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 최대한 반영하는 한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부처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 참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따라서 아래와 같이 지시하니 각급 기관은 기관 상호간 협조의 중요성을 재삼 인식하고 정책의 입안 과정은 물론, 일단 확정된 시책의 추진에 있어서도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시행 착오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아 려

가. 각종 정부시책의 입안자는 입안과정에서 관계기관과의 관련성을 반드시 고려하고,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시책안에 포함시킬 것.

나. 각급 기관의 중간 결재자는 시책안의 결제 과정에서 타기관 업무와의 관련사항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하도록 할 것.

다. 중간 결재자 선에서의 의견 상충으로 협의를 보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 의견사항을 그 상급자선에서 협조하고 그래도 합의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차상급 기관의 조정을 받을 것.

라. 협의를 요청받은 기관은 협의 사안에 대하여 성의있게 검토한 후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시키는 방안에 관하여 함께 연구 조치하여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마. 전임 기관장이 일단 합의 또는 약속한 사항에 관하여는 후임 기관장도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 정부 시책의 일관성을 견지할 것.

바. 예산 사정등으로 합의되지 못한 사안을 관계부처와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상급 기관에 품의, 제가를 독하여 강행
함으로써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사. 협의의 지체와 비능률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의는
가급적 회의 형식이나 대화를 통하여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최종적으로 문서로서 관계기관의 의사를 확정해 둘 것.

아. 시책을 확정하여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이전에
특히 협의과정에서 내용이 외부에 누설되어 불필요한 물의
를 야기시키지 않도록 협의에 참가하는 관계자는 특히
유의할 것. 끝.

국 무 총 리

수신처: 가(11-50)
나(1-11)